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는 성평등 공약에 투표한다!” 성인지공약 분석결과, 돌봄과 재생산에 편중, 변혁적인 성평등은 실종

- 인천여성민우회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이하 성인지넷)는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유권자의 후보 선택 기회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접근을 강화시키고자 정당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약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제 분석을 했다(이하 성인지공약분석).
- 성인지공약분석의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시된 지방선거 관련 정당정책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후보의 공약이 중심이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젠더공약분석의 경험이 있고 성인지넷 회원단체인 인천여성민우회는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장(구·군의 장) 후보 공약을 대상으로 성인지공약분석을 했다.
- 성인지넷 공동대표 이은경의 주관으로 성인지넷 회원(단체) 6명과 인천여성민우회 회원 4명의 참여로 이뤄졌다(가나다순, 성인지넷: 김선희, 김희경, 박지영, 손은성, 윤혜경(광주여성민우회), 이은경. 인천여성민우회: 문새미, 문지혜, 이은경, 채현자).
- 성인지공약분석은 ‘성인지공약 분석지표(16개)’를 검토한 것이다.
 - 성인지공약 분석지표는 인천여성민우회의 ‘젠더공약 분석지표’(2025)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2025 지역성평등정책 모니터링 종합 보고서: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현황과 과제>(2025)를 참고하여 최종 16개로 구성되었다.

구분	구조	성평등 의제	과제
1	정치	공공부문 의사결정구조 성별균형 강화 및 여성의 대표성 확대	성평등
2	정치	공직선거 후보자의 특정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시행	성평등
3	정치	성평등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	성평등
4	정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 강화	성평등
5	경제	경력단절예방 및 대응,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노동
6	경제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근절 위한 제도 마련	노동
7	경제	고용노동관서 차별시정국 및 고용평등실 설치,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 및 강화	노동
8	경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근절	노동
9	문화	남성 육아휴직 이용 촉진 등 성별 돌봄부담 불평등 해소	돌봄
10	문화	기후 및 성인지 돌봄권 보장 및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구분	구조	성평등 의제	과제
11	문화	포괄적 차별금지교육, 시민·평등·포용교육과 포괄적 성교육 확대	교육
12	문화	온오프라인상 혐오 차별 표현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미디어
13	법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방지 관련 기준 (조례 및 지침)	인권
14	법	여성건강, 안전한 임신중지 관련 조례 및 지침	인권
15	법	성매매여성 피해구제 및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 추진 (조례 및 지침)	인권
16	법	시민으로서의 이주배경여성 체류 안정성 보장 (조례 및 지침)	인권

- 성인지공약 분석지표에서 성평등 의제(16개)는 정치(4)·경제(4)·문화(4)·법(4) 등 구조적 측면과 성평등(4)·노동(4)·돌봄(2)·교육(1)·미디어(1)·인권(4) 과제를 반영한다.
 - 각 공약에서 성평등 의제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을 검토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시된 15개 정당정책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공약분석 결과, 총 16개의 지표 중 여성의당(15), 정의당(12), 진보당(10), 노동당(10), 기본소득당(5), 더불어민주당(5), 녹색당(4), 개혁신당(3),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각 2개, 사회민주당과 국민연합, 대한국민당 각 1개 순으로 각 정당에서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이 나타났다.
- 15개 정당의 정책에서 돌봄 지원과 난임 및 출산지원 관련 의제가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 특성과 이와 관련된 성역할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 참여 중심인 정치, 경제 영역의 경우 성평등 전담부서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관련 의제를 제외하면 1~3개 정당에서만 관련 정책이 나타났고 대부분 정당의 정책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성인지공약 분석지표 중 가장 많이 (부분)적용된 것은 ‘기후 및 성인지 돌봄권 보장 및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15개 정당 중 11개 정당에서 관련 정책이 (부분)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 많이 (부분)적용된 것은 ‘여성건강, 안전한 임신중지 관련’ 의제로 9개 정당에서 난임, 임신출산 지원 관련 정책 중심으로 나타났다.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 강화’ 관련 성평등 의제는 여성의당과 정의당, 노동당 등의 정책에서만 발견되었다.
 - 정당정책으로 가장 적용되지 않은 성평등 의제는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근절’과 ‘성매매 여성 피해구제 및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 추진’으로 여성의당에서만 관련 정책이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성평등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근절 위한 제도 마련’을 정당정책에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육아돌봄 국가보장’ 및 ‘교제폭력처벌, 디지털성범죄 대응’, ‘난임지원’, ‘여성장애인 다중 차별구조 개선’ 등이 주목되었다.
 -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은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이 전무하고 오히려 성평등을 거부하는 공약(할당제 및 성평등가족부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에 대한 성인지공약분석 결과, 돌봄 지원 관련 공약이 전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53명 중 28명(52.8%)의 공약에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로 공약에 많 이 (부분)적용된 의제는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 경제적 지위 향상과 여성의 임신출산, 난임 지원 등 건강 관련 의제로 각 10명(18.9%)의 후보 공약에서 나타났다.

- 그러나 정치 영역 관련 공약은 다른 영역에 비해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이 적게 나타났다. 특히 성주류화 및 성평등정책 강화 관련 공약을 제시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전체 53명 중 단 한 명도 없었다.
 -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별로 보면, 전체 53명 중 6명(11.3%)은 5개 이상의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많은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을 가진 후보는 서울특별시장 선거 유지혜(여성의당) 후보로 총 10개의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을 가졌다. 다음은 경기도지사 선거 홍성규(진보당) 후보로 총 8개의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이종욱(진보당), 강은미(정의당) 후보로 각 6개의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이 확인되었다.
 - 한편 전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중 12명(22.6%)의 공약에서는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을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12명 중 다수 정당 후보로 출마한 부산광역시장 박형준(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이상호(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양정우(국민의힘), 경상북도지사 오중기(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지사 김경수(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에서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이 확인되지 못했다.
 -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 후보(5개) 이외에는 3개 이하의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이 나타났으므로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다고 판단되었다.
- 인천지역 11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약에 대한 성인지공약분석 결과, 돌봄 지원 관련 공약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전체 24명 중 15명(62.5%)의 공약에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남성 육아휴직 및 성별 돌봄부담 해소 관련 공약이 4명(16.7%)의 공약에서 확인되었다. 그 다음은 여성의 난임 및 임신출산 지원 관련 공약이 3명(12.5%)의 공약에서 발견되었다.
- 성평등 의제 중 정치와 경제 영역 관련 공약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별균형 의무화 및 성평등 전담기관 및 거버넌스, 성주류화 및 성평등정책 강화,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근절, 고용평등실 및 고용평등상담실 강화, 직장 내 성차별 괴롭힘 근절 관련 공약은 단 한 명의 공약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 또한 최근 여성운동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차별금지 관련 공약,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방지 관련 공약 등이 부재했다. 인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성매매여성 피해구제 및 수요차단 관련 공약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별로 보면, 전체 24명 중 2명(8.3%)은 3개의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에는 모두 2개 이하의 성평등 관련 공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8명은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이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
 -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중 가장 많은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계양구 박형우(더불어민주당), 서구 구재용(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 인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중 성평등 의제 관련 공약이 전무한 8명은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 성인지공약분석의 결과, 우리는 성평등 공약에 투표하고 싶으나 성평등 공약은 돌봄에 편중되고 여성에 대한 지원은 재생산 역할에 한정되며 변혁적인 성평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2026년 6.3지방선거 대응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성인지공약분석안

공동대표 이은경

○ 목적

- 2026년 민선9기 6.3지방선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을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관점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방선거 유권자 시민에게 성평등 민주주의와 관련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대상

-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포함)

○ 일정 및 내용

- 선거일정

- 3.22.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5.14~15. 후보자등록 신청
- 5.20. 선거벽보 제출
- 5.21. 선거기간 개시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5대 공약 확인
- 5.21~6.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및 토론회 개최
- 5.22.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첨부
- 5.26. 선거공보 확인
- 5.29~30. 사전투표
- 6.3. 지방선거 투표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s://www.nec.go.kr/site/lvt/main.do#\(2026.5.18.인출\)](https://www.nec.go.kr/site/lvt/main.do#(2026.5.18.인출))
정책브리핑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ng3657/224285252918\(2026.5.18.인출\)](https://blog.naver.com/yong3657/224285252918(2026.5.18.인출))

- 성인지공약분석 방법

① 대상 :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별 공약

: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별 공약 (인천)

② 참여 : 성인지넷 운영위원 5명 및 회원 1명, 인천여성민우회원 4명

③ 일정 및 내용

- 5월 21 ~ 26일. 지방자치단체 후보별 성인지공약분석 및 자료 제출
- 5월 27 ~ 28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공약분석 종합검토 및 보도자료 작성 배포
- 5월 29일 언론 공표

○ 성인지공약 분석지표안

- 성인지공약분석지표안은 인천여성민우회의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젠더공약분석지표(18개)에서 수정 보완한 것임

- 인천여성민우회(2025)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의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과제 리스트’ (2025.2월)를 검토하고 성평등 정책과제를 분석하여 ‘성평등 의제 18개’를 채택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개정하기 어려운 법적 영역의 성평등 의제 4개를 제외함: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여성장애인지원법.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2025 지역성평등정책 모니터링 종합보고서’를 참고, 2개 지표를 추가하여 총 16개 성인지공약 분석지표를 제시함
- 한국여성단체연합(2025)은 윤석열 정부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정치와 여성가족부 폐지 정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정책 영역이 “성주류화 및 여성노동, 여성의 경제적 지위 관련 정책”이라는 진단을 함. 이와 관련하는 지표를 정치, 경제 영역으로 2개 추가함

[표] 6.3지방선거 후보자 성인지공약 분석지표안

구분	구조	성평등 의제	과제	후보1	후보2	후보3	후보4	후보5
1	정치	공공부문 의사결정구조 성별균형 강화 및 여성의 대표성 확대	성평등					
2	정치	공직선거 후보자의 특정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시행	성평등					
3	정치	성평등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	성평등					
4	정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 강화	성평등					
5	경제	경력단절예방 및 대응,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노동					
6	경제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근절 위한 제도 마련	노동					
7	경제	고용노동관서 차별시정국 및 고용평등실 설치,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 및 강화	노동					
8	경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근절	노동					
9	문화	남성 육아휴직 이용 촉진 등 성별 돌봄부담 불평등 해소	돌봄					
10	문화	기후 및 성인지 돌봄권 보장 및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구분	구조	성평등 의제	과제	후보1	후보2	후보3	후보4	후보5
11	문화	포괄적 차별금지교육, 시민·평등·포용교육과 포괄적 성교육 확대	교육					
12	문화	온오프라인상 혐오 차별 표현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미디어					
13	법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방지 관련 기준 (조례 및 지침)	인권					
14	법	여성건강, 안전한 임신중지 관련 조례 및 지침	인권					
15	법	성매매여성 피해구제 및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 추진 (조례 및 지침)	인권					
16	법	시민으로서의 이주배경여성 체류 안정성 보장 (조례 및 지침)	인권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X

*자료: 후보자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 (<https://policy.nec.go.kr/>)

주1) '구조'는 사회정의의 4차원 개념(경제적 분배/문화적 인정/ 법적 처우/ 정치적 대표)이 사회구조에 기초함을 이룸. 이은경(2019),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선거 공약과 성 주류화: 사회 정의 관점에서 성 주류화의 틀짜기", 「정부학연구」 제25권 제3호: 219-249. 참고.

2) '성평등 의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함

인천여성민우회(2025), 보도자료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6명) 젠더공약 분석결과, "차기 정권에서 추진될 성평등 사회 밑그림이 모호해"

한국여성단체연합(2025), '2025 지역성평등정책 모니터링 종합 보고서 :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현황과 과제'

3) '과제'는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의 과제 영역 의미.

○ 기대효과

- 6.3지방선거에 대응하여 후보자 공약을 성인지적으로 분석, 공표함으로써 지역민이 성평등 민주주의 관련 성인지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정책 입안 시 지역민이 요구하는 성인지 정책의 기준 마련에 적용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관련 성인지공약 모니터링 및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정책 및 성주류화를 강화함으로써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함

